

‘李 지역구’ 빼고 與 사고당협 공모… 非尹 배제 해석 선긋기

(이준석 전 대표)

위원장 공석 66개 사고 당협위 공모
李 전 대표 내정 당협 중 13곳 포함
허은아 “재공모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위원장이 공석인 66개 사고당협위원회에 대해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공모 기간은 10일~16일이며, 17일~18일간 지원자 서류 접수를 받는다. 사고당협위원회는 모두 69곳인데 이 가운데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 추가 공모 받는 것이다.

당 조강특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사고당협은 69곳인데, 그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인 3개 지역을 제외한 66곳에 대해 추가 공모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면 김 총장은 추가 공모를 하게 된 때 대해 “이미 5개월, 6개월 전에 서류 접수 받아 5~6개월 경과하는 동안 사정 변경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비윤계 당협위원장 숙아내기 위한 조직 정비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장은 기존에 서류 접수한 인사들은 일체의 다른 절차가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공모할 분들만 (서류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윤계 당협위원장) 숙아내기 위한 조직 정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 밖에 김 총장은 조직 정비 완료 시점에 대해 “예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내주 금요일(18일)까지 추가 공모 접수를 받기 위해 그것이 완료돼야 정상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69곳 면접을 거쳐 필요하면, 현지 실태조사나 여론 수렴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성공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대상자 모두에게 면접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인 3개 지역이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조강특위 측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와 관련 친(親)이준석계 등 ‘비윤석열계’ 당협위원장 숙아내기’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추가 공

모를 하면서 이 전 대표 체제에서 내정된 16개 당협 가운데 13곳도 포함시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조강특위를 구성, 14명의 당협위원장까지 내정한 바 있다.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은 거치지 못했다.

당시 내정된 당협위원장에는 이 전 대표 측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정미경(경기 성남분당을) 전 최고위원, 허은아(서울 동대문을) 의원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조강특위의 추가 공모 절차가 ‘비윤계 당협위원장 숙아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된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6개월 전에 조직위원회를 내정했음에도, 정상적인 당의 조강특위가 결정한 것을 비대위의 조강특위가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5월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28개 지역 조직위원회 공모 당시에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상태”라며 “당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돼 있는 일에 대해서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채택

이르면 오늘 국회에 법안 제출
정부도 올해 안에 입법화 추진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이르면 이번 주중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위기 가운데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업계 관계자 등은 9

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 결과,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이르면 10~11일께 국회에 법안 제출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는 법안은 ▲약정서 내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안 기재 의무화 ▲일방적인 갑의 위력에 합의한 경우 책임 소재 묻기 ▲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 조정 요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토로 시정권고 또는 명령 등 법적 근거 마련 ▲지방 중

소벤처기업청 등 소속기관장의 직권조사 및 분쟁조사 등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 동안 꾸준히 논의됐음에도, 시장 경제 원리와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점검도 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자와 동행을 하는 우리 당의 1호 공약이자 법안”이라며 “사적 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제어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힘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아마도 납품 대금,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부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점에 대해 밝힌 뒤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된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시스템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도 해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떠안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수탁기업, 근로자 41.5%가 수탁 기업에서 종사하기에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근로자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野3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등 관리체계 작동 실태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9일 10시 15분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도로폭 4미터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헬러운 행사를 즐기려온 시민들이 뒤팡기면서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17일 기준) 최악의 압사로 기록됐다.

의안과에 접수된 요구서에 따르면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자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과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사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서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방재 당국의 즉각적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만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10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내일부터 4박5일 동남아 순방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후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EAS 종료 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B20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